

2014년 환경보건정책방향

환경보건정책의 영역은 대기, 수질 등 환경매체에 배출된 오염물질이 수용체인 인간에 도달하여 건강피해를 야기하는 일련의 과정을 규명하여 예방·관리하는 폭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보건정책은 다른 매체별 환경정책에 비해 뒤늦게 출발하였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전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 호 중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졸,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 석사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토양지하수과장, 국토환경정책과장 등 역임
 tel. 044-201-6750 | hohojoong@korea.kr | hohojoong@hanmail.net

구미 불산누출사고(2012.9.27) 이후에도 크고 작은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한 산업단지의 화학물질 취급·저장시설은 노후화되어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화학안전문화는 단시일 내에 정착되기 어렵고, 화학안전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같은 생활주변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의한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선진화된 화학물질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다양한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예방·관리 기법을 개발하여 환경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층간소음, 실내공기질, 라돈 등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정책과제이다.

화학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 구축

2013년에 이어 정부, 학계, 전문가, 기업,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화평법·화관법 협의체 운영을 연장하여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통해 화평법·화관법 하위 법령과 지침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산정을 구체화하고,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감경기

준을 마련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절차 등을 마련할 것이다.

산업계에서 신설·강화되는 제도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이다. 관계부처 합동 “산업계 지원단” 발족, 산업계 도움센터(Help-desk)를 운영하여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안전 무상교육과 컨설팅(환경부, 800개소)을 추진하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기술지침서, 범용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현장교육도 실시할 것이다. 노후화된 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자금을 용자·보조(환경부, 고용부, 중기청, 1조366억원) 해주고, 기업의 예견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화학물질 중에서 등록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사전에 예고할 것이다.

화학안전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역량을 확충할 것이다. 새롭게 개소한 6개 합동방재센터, 화학물질안전원 등의 기능을 반영하여 화학사고 표준매뉴얼을 개정하고, 주기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화학물질 운송 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학사고 대응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환경측정분석차량과 사고대응장비를 도입하여 화학사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화학물질의 등록(형식적 검토)과 심사절차(실체적 검토)를 구분하여 등록 후 시장출시가 가능하게 하고, 구조의 유사성 등으로 유해성 판단이 가능하면 non시험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하는 것을 인정하는 등 등록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해 나갈 것이다. 화학물질의 인체·환경유해성 심사기법을 확립하고, 단계적 유해성 평가기술과 체계를 정립할 것이다. 화학물질평가 기본계획('14~'18)을 마련하여 기존화학물질의 단계적 등록, 허가물질 지정 방안 등을 제시할 것이다.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개발하여 화학물질 등록·평가 전과정을 IT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며, 안내서 마련, 전문인력 양성, 시험기반 기술 확보 등을 추진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위해우려제품 유해성평가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에 위해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위해우려제품 품목별 유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해 나가 것이다.

취약 계층·지역에 대한 환경보건대책 강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실,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을 높여 나갈 것이다. 환경보건법의 환경안전기준이 적용되는 시설('09.3.22 이후 설치된 38,400개소)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환경안전기준 준수여부를 단계적으로 점검을 완료할 것이다. 환경안전기준이 2016년 이후 적용되는 시설 5천개소에 대해 무료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조기에 환경안전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설·증축·수선 시 사전에 환경안전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도(확인검사)를 도입하고, 초등학교의 도서관이 새롭게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추가된다. 유통중인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유통경로를 차단해 나갈 것이다.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135종에 대한 유해성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4종의 어린이용품 사용제한·금지대상 물질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금지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어린이용품 사용제한·금지 물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가정의 환경성질 환 아동에 대한 무료검진, 주거환경 진단 및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태아기로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 까지 유해물질 노출과 건강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인과관계를 추적조사하는 '대규모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시행을 위한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조사결과 '거의확실' 및 '가능성높음'으

로 판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와 장례비(사망자)를 지급하고, 가해기업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영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가능성 낮음' 단계로 판정받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건강관리와 폐이외의 피해에 대한 건강영향을 조사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그리고 양로원 등 노인활동공간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진단해주고, 도배, 장판교체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방법을 교육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산업단지, 폐금속광산 등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 고위험군 건강검진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등 건강영향평가 대상 사업 입지지역에 대한 위해도 DB를 구축하여 향후 GIS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산업단지 주변에 입지하려는 택지나 도시건설 사업 등 건강영향이 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우선 평가기법 개발과 시범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라돈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었으며 흡연 다음의 폐암유발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주택 5채 중 1채 꼴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라돈 권고기준(148Bq/m³=4pCi/L)을 초과할 실정이다. 2020년까지 전국 주택 20만호 조사를 통해 전국라돈지도도를 작성하여 라돈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라돈 조사결과 취약주택에 대해서는 무료저감 컨설팅 및 알람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라돈전국조사('13~'14년)와 병행하여 라돈 고농도 지역을 라돈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

도록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라돈방출 건축자재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라돈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금년 5월부터 빗공해방지종합계획 시행에 따라 빗공해관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 경기, 인천지역에 '빗공해영향평가' 실시를 지원한다. 빗공해 유발 조명기구를 친환경 조명기구로 교체하는 '좋은빛 환경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전자파 환경위해성을 관리하기 위해 무선주파수 노출 실태조사, 위해성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해도 소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 학계전문가, 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자파 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구당 국고지원금을 상한을 96만원에서 144만원으로 높였으며, 석면의 위해성 등급, 자재의 상태 등에 근거한 석면건축물 세부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시범적용 및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 보건소와 협력한 홍보 강화, 건강보험공단 진료정보를 활용하여 석면피해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석면피해구제기금 중·장기 지출 예측 및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환경보건정책의 영역은 대기, 수질 등 환경매체에 배출된 오염물질이 수용체인 인간에 도달하여 건강피해를 야기하는 일련의 과정을 규명하여 예방·관리하는 폭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보건정책은 다른 매체별 환경정책에 비해 뒤늦게 출발하였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전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